

# 제2차 다문화정책 워크숍

- 일 시 : 2019. 11. 7. (목) 15:00
- 장 소 :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 제2차 다문화정책 워크숍

## -다문화정책 현황과 충청남도 다문화 연구과제 발굴-

---

### ①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104,854명( '17.11.)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4.8%를 차지하여 전국 1위 수준임
  - 외국인 주민수가 10만 명 이상인 동시에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4%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서울, 경기 세 곳임
- 충청남도 지역맞춤형 다문화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 추진
    - 지자체에 이민전담 부서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참여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 자율성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범부처 인구정책 TF : 우수 외국인재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활력제고
    - 수도권, 대도시 외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유치·적응 프로그램 도입
- 2020년도 충청남도 다문화 연구과제 발굴 필요
  -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차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관련 연구과제 발굴 모색

### ② 개요

- 일시 : 2019. 11. 7. (목) 15:00 ~ 16:30
- 장소 :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 주최 : 충남연구원

### 3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 15:00	30' [참석자 등록]	
15:00 ~ 15: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고승희 실장(충남연구원)	○ 전체사회 : 고승희 실장 (충남연구원)
15:05 ~ 16:30	85' [발제 및 종합토론] 좌 장 : 송두범 단장(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  발 제 : 유민이 부연구위원(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 다문화(이민)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 1: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 토론 2: 유초롱 사무국장(홍성군건강가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론 3:김진영 책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16:30 ~	[폐회]	



# 목 차



## I. 다문화(이민)정책의 현황과 과제

유민이 부연구위원(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 II. 종합토론





# 다문화(이민)정책의 현황과 과제

유민이 부연구위원  
IOM이민정책연구원





## 다문화(이민)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9. 11. 07

유 민 이  
(이민정책연구원)

my.yoo@mrtc.re.kr



## 01

#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 이주 vs 이민

- 이주: 국내이주 + 국제이주 (들어오는 이민 + 나가는 이민)

Migration = Domestic M + International M (Immigration + Emigration)

- 국가정책에서는 들어오는 이민과 나가는 이민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들어오는 이민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 나가는 이민 → 외교부 (해외이주법)

- 이민자

- UN기준으로 장기이민자는 1년 이상, 단기이민자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일상적 거주지를 다른 나라로 옮긴 사람으로 정의
-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의 법적 정의 조항이 없음
-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장기/단기체류자로 구분함(90일 기준)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01

#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 이민자 정의

- 다문화가족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이(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
- 외국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 유학생
  - 단기취업(C-4), 각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01

##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 이민자 정의

####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있던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재외동포와의 차이점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외국국적동포보다 범위가 넓음

#### ■ 외국인 주민

-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 및 그 자녀
-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률 용어는 아님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01

##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 외국인 주민 현황

####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수 증가

- 2006년: 536,627명 → 2017: 1,861,084명 (약 10년 사이 3.5배 증가)
-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이상인 광역지자체: 10개

구 분	인구 대비 4% 이상	인구 대비 3% 이상	인구 대비 2% 이상	인구 대비 2% 미만
외국인주민수 10만명 이상	경기 서울 충청	경남 인천	대전 광주 강원	부산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대구 충청 전남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	제주	울산	대구 전남 강원	대구
외국인주민수 3만명 미만			세종	대전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EBSMSTR\\_000000000014&nttid=66841](https://www.mois.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EBSMSTR_000000000014&nttid=66841))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01

##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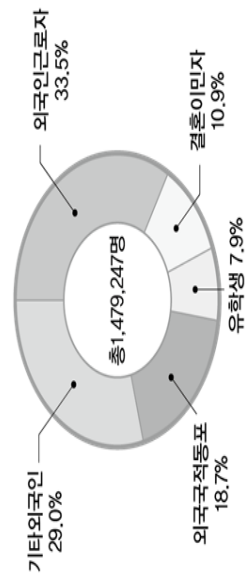
### 외국인 주민 현황

####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외국인주민 합계

(단위 : 명)

구분	외국인 주민 합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계녀 (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등포	기타 외국인		
17년	1,861,084 구성비	989,286 (53.2%)	871,798 (46.8%)	1,479,247 (79.5%)	495,792	160,653	117,127	276,750	428,925	169,535 (9.1%)	212,302 (11.4%)
16년	1,764,664 구성비	946,561 (53.6%)	818,103 (46.4%)	1,413,758 (80.1%)	541,673	159,501	95,963	235,926	380,695	159,447 (9.0%)	191,459 (10.8%)
증감	96,420 (5.5%)	42,725 (4.5%)	53,695 (6.6%)	65,489 (4.6%)	△45,881 (△8.5%)	1,152 (0.7%)	21,164 (22.1%)	40,824 (17.3%)	48,230 (12.7%)	10,088 (6.3%)	20,843 (10.9%)



#### 총 1,479,247명 중

- ① 외국인근로자 : 495,792명 (33.5%)
- ② 기타외국인 : 428,925명 (29.0%)
- ③ 외국국적동포 : 276,750명 (18.7%)
- ④ 결혼이민자 : 160,653명 (10.9%)
- ⑤ 유학생 : 117,127명 (7.9%)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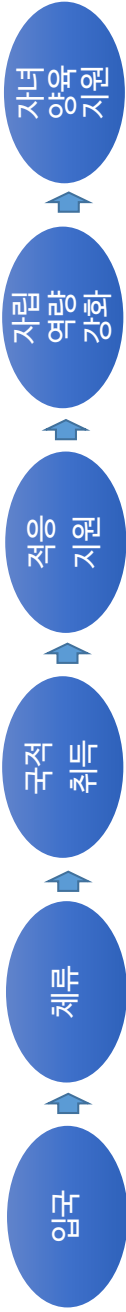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단계별 정책



단계	관계부처	주요정책
입국	법무부	비자요건, 심사시스템 관리 및 개선 브로커 등 조사단속 방문취업 동포 연간 입국인원 조절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출입국 심사제도 개선
	교육부	해외학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예비결혼이민자 사전정보 제공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준비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연간 외국인력 수급조절 입국 전 취업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활성화

- 01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 02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 03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단계별 정책

01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02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03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단계	관계부처	주요정책
체류	법무부	사증정책 등 제도개선 외국인등록 관련 제도 개선 불법체류대책 마련 및 정보공유, 외국인 동향조사 이민연락관 파견 등 이민관련 업무
국적취득	법무부	국적취득 심사제도, 시스템 개선 결혼이민자 입국 후 생활실태(위장결혼여부 등) 조사 귀화요건, 필기시험방법 등 제도개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적응 및 생활 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정부 내 인권침해 구제기구 운영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제공 이민자 네트워크 등 자조모임 지원 다문화 관련 포럼 세미나 개최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정보 시스템 관리, 통계 관리
	행정안전부	지자체 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지원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축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인력양성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 확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체육행사, 전시회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확대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단계별 정책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단계	관계부처	주요정책
적응 및 생활 지원 (계속)	여성가족부	다문화이해 강사 확충, 교육강화 다문화 관련 세미나, 방송 프로그램 추진 통번역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활성화, 자조모임 지원 이주여성간접지원센터 등 보호시설 확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고용주,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고충상담 법률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외국인 장애인 관리, 기초생활보장 업무
	법무부	단순기능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공공부문 채용 확대
자립역량강화	농림식품부	결혼여성이민자 농업기술교육
	과학기술통신부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구축 운영 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자립모델 개발,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취업지원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단계별 정책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단계	관계부처	주요정책
자녀양육지원	교육부	다문화 이해관련 교재, 자료 개발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전 학습능력 발달지원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학교단위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 교실 운영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지도 학교 부적응, 중도 탈락자 교육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여성가족부	임신, 출산,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이중언어교육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취학전 학습능력 발달 지원 다문화 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다문화 청소년 전문가 양성



## 02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대상별 정책

####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현황

- 비전문인력+전문인력+단기취업 등
- 2010년 558,538명 → 2016년 541,673명

#### 시책

- 유입
  - (고용부) 현지 한국어시험 통해 외국인력선발, 현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45시간), 입국 후 업종별 취업교육(16시간) 이수 후 사업장 배치
- 정착
  - (고용부)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등을 통해 교육/직업훈련, 고용상담
  - (고용부+법무부 합동)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동 사업장 지도점검(연 2회)
- 사회통합
  - (고용부) 귀국 후 생활설계컨설팅, 현지 정착 성공근로자 초청 강연 등
  - (법무부) 비전문인력(E-9) 중 인력조건 이상 충족자 전문인력(E-7) 비자 전환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대상별 정책

#### 외국국적동포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현황

- (행안부) 국내거소신고자 235,926명 (2016년 기준)
- (법무부) 국내거소신고사 + 방문취업 + 방문동거 841,308명 (2017년 기준)

#### 시책

- 유입
  - (법무부) 사업장 업종 선택이 자유로운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
  - (고용부) 총 체류한도 (303천명) 내로 관리, 연도별 쿼터 없음
- 정착
  -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시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권리 보장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대상별 정책

#### 유학생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행안부) 체류자격기준: 95,963명(2016년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 체류자격 불문 외국인 재학생 수 기준: 104,262명(2016년 기준)
  - 중국유학생: 53.9%, 학부생: 37.4%, 수도권재학: 57%

- 유입
  - (법무부)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지원
  - (고용부)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 (고용부) ASEAN국가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 사회통합
  - (고용부+산자부) 유학생 채용 박람회
  - (산자부+법무부) 국내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유학생 취업연계
  - (법무부) 우수유학생 구직기간 확대(1년 → 2년)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대상별 정책

#### 결혼이민자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행안부) 159,501명
  - 다문화 혼인 건수(2016): 121,709(7.7%)
  - 다문화 이혼 건수(2016): 10,631(9.9%)

#### 현황

- 유입
  - (법무부) 배우자대상 국제결혼안내 및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 (여가부) 결혼이민 예정자 현지사전교육
  - (여가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휴대용 가이드북 제작 및 재외공관 배포
- 정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여가부) 결혼이민자 멘토링
- 사회통합
  - (여가부+고용부)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을 통한 취업교육
  - (여가부) 자녀양육 지원 및 가족상담

#### 시책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대상별 정책

#### 귀화자

##### 현황

- (행안부) 96,461명(2010년) → 159,447명(2016년)

##### 시책

- 정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 시 귀하 필기시험면접시험 면제
- 사회통합
  - (법무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금심 고취를 위한 귀화증서 수여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02

# 이민 · 다문화정책 현황



### 대상별 정책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01

02

03

#### 현황

- 중도입국자녀: 9,874명(2016년)
- 국내출생자녀: 191, 459명(2016년)
  - 다문화출생아 수: 19,431명(4.8%)

#### 시책

- 전체
  - (교육부) 다문화유치원 운영(2017년도 기준 17개 시도, 90개원) 및 다문화유치원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정착
  - (여가부)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언어진단 및 교육서비스 제공
  - (여가부+교육부) 이중언어교육 지원(교재보급,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
  - (교육부) 글로벌브릿지 사업단(20개)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 개발
- 중도입국자녀
  - 안정적 정착지원: (여가부) 방문한국어 교육서비스, 초기적응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운영(15개 시도, 23개소)
  - 공교육 진입 유도: (법무부) 신규 중도입국자녀 정보 교육부 제공, (교육부) 한국어,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예비학교(160학급) 및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03

## 이민 ·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1) 정책대상의 확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 → 정주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 ■ 현황(현행 정책)

	(정책유형)	유입·유지 정책	체류관리 (사회통합 전 영역 단계)	조기적응	사회통합				국제협력 (송출국/ 지역/국 제기구)
					노동시장통 합 (고용)	교육	복지 (포용)	사회참여 (시민권)	인권, (문화다양성)수용 및 인식개선
단기 순환형	이민정책대상								
	단기영민(관광객)	유지	○						
	투자자	유지	○						
	단순기능인력	유입	○	○	○	○	○	○	○
	전문인력	유지	○	○	○	○	○	○	○
	외국기업 주재인	-	○	○	○	○	○	○	○
장주형	유학생	유지	○	○	○	○	○	○	○
	재외동포	유입/유지	○	○	○	○	○	○	○
	난민	유입	○	○	○	○	○	○	○
	결혼이민자(가족)	유입	○	○	○	○	○	○	○
	영주자·객자		○		○	○	○	○	○
	이민배양자녀 - 애인/국내 출생				○	○	○	○	○
	일반국민 (이주배경국민)								(○)

○ : 국내에서 거의 시범되지 않는 정책



### 03

## 이민 ·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1) 정책대상의 확대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 → 정주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 [정책방향]

- 1) 외국인주민 구성비율이 높고 정주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확대 실시
  - 유학생, 숙련기술인력(특정활동, E-7), 재외동포
  - 입학습병행제와 같이 유학과 취업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주경로 개발
- 2)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대상확대 및 프로그램 내용의 질 향상
  - 결혼이민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정주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점차 확대
  - 프로그램의 내용을 교육 위주에서 체험 및 쌍방향 위주로 확대
  - 사회통합의 방향을 정주이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합류되는 방향으로 개편(일부지자체 우수사례 확산)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03

## 이민 ·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2) 유입된 이민자 관리

- 외국인유입 및 유치 정책 → 수요기반 유입 및 유입된 이주민에 대한 정착화
  - 체류 외국인인은 지속 증가해 왔으나('11년 140만명 → '18년 237만명, 국민의 4.6%), 우수 전문인력 유입은 정체('11년 4.8만명 → '18년 4.7만명)
    - \* 2017 이민정책쟁점지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 ① 스위스, ② 홍콩, 싱가포르, 한국, 중국
  -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지방 거주 국민은 지속 감소
    -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가임여성 인구 수가 노인인구의 절반이 안되는 지역)은 '13년 75개(32.9%)에서 '18년 89개(39%)로 증가('18. 한국고용정보원)
  - 현재 전문/비전문 외국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학력/고임금의 전문/숙련 인력 유치에 한계
    - \* '19.7월 주요 취업자격(E1~E7, E9, E10, H2, F4) 외국인 107만 명 중 비전문인력(E9, H2)은 약 52만 명으로 48.6% 차지
    - 향후 국가경쟁력 유지, 국민일자리 보호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03

## 이민 ·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2) 유입된 이민자 관리

- 외국인유입 및 유치 정책 → 수요기반 유입 및 유입된 이주민에 대한 정주화

#### [정책방향]

- 1) 우수 외국인재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1차 인구 TF)
  - 인구감소지역에 우수외국인 장기비자 혜택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 ✓ 지방대 (폴리텍, 기능대 등),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에서 숙련기능공 등 요수 외국인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거주 시 장기체류 허용 확대
    - ✓ 인구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 장기비자 취득 시가 점 부여
    - ✓ 수도권·대도시 외 인구감소 지역의 외국인 유치/적응 프로그램 도입
- 2) 정주이민자(결혼이민자 등)의 경우 정주 후 역량강화에 초점 (2차 인구 TF 예정)
  - 결혼이민자 일자리 알선 및 소개 → 고용상태 지속을 위한 역량강화(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창업지원 확대 (중기부, 고용부)



# 03

## 이민 ·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3) 지역맞춤형 정책

■ 중앙정부의 기획중심 → 지자체 현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 01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 02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 03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현황(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19)의 지자체 사업)

광역지자체	공통과제 (위임, 공동)		자책과제		(단위: 개, 백만원)	
	과제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경기도	8 (8.1%)	9,365 (39.5%)	91 (91.9%)	14,371 (60.5%)	99	23,736
강원도	8 (21.1%)	3,159 (59.0%)	30 (78.9%)	2,193 (41.0%)	38	5,352
충청북도	10 (17.9%)	3,908 (74.7%)	46 (82.1%)	1,322 (25.3%)	56	5,230
충청남도	32 (34.0%)	1,609 (19.9%)	62 (66.0%)	5,469 (67.6%)	94	8,086
경상북도	5 (9.3%)	4,198 (35.4%)	49 (90.7%)	7,675 (64.6%)	54	11,873
경상남도	7 (9.2%)	5,921 (57.3%)	69 (90.8%)	4,409 (42.7%)	76	10,330
전라북도	13 (25.5%)	18,864 (85.3%)	38 (74.5%)	3,245 (14.7%)	51	22,109
전라남도	13 (15.5%)	7,201 (56.4%)	71 (84.5%)	5,575 (43.6%)	84	12,776
제주특별자치도	15 (40.5%)	2,138 (18.1%)	22 (59.5%)	9,688 (81.9%)	37	11,826
서울광역시	5 (4.5%)	16,236 (46.3%)	105 (95.5%)	18,846 (53.7%)	110	35,082



# 03

## 이민 ·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3) 지역맞춤형 정책

- 중앙정부의 기획중심 → 지자체 현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 ■ 현황(지자체 조직체계)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주민 분포		전담 부서 유/무	부서 명		이민정책 조직체계				
	외국인주민 수(명)	외국인주민 비율(%)		실, 국	과	담당 공무원 (명)	실, 국 공무원 (명)	지자체 공무원 (명)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 비율(%)	
경기도	603,609	4.7%	O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19	103	2,898	1.04%	
강원도	31,123	2.1%	X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11	53	1,425	0.21%	
충청북도	61,246	3.8%	X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3	114	1,128	0.27%	
충청남도	104,854	4.9%	X		여성가족정책관	3	33	1,128	0.27%	
경상북도	83,898	3.1%	X		여성가족정책관	5	27	1,318	0.38%	
경상남도	116,379	3.5%	X		여성가족정책관	2	37	1,453	0.14%	
전라북도	49,840	2.7%	X	대외협력국	여성가족정책관	4	30	1,431	0.28%	
전라남도	55,504	3.1%	X		여성가족정책관	3	22	1,211	0.33%	
			X		인구청년정책관	1	15			
제주특별자치도	25,646	4.0%	X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4	94	1,063	0.38%	
서울광역시	413,943	4.3%	O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20	136	4,437	0.45%	



# 03

## 이민 ·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3) 지역맞춤형 정책

중앙정부의 기획중심 → 지자체 현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 01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 02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 03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현황(지자체 외국인주민 구성대비 담당부서)

지자체	외국인주민 구성(전체외국인주민 대비 %)					담당부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주민 자녀	기타외국인	실, 국
경기도	7.8	31.3	2.4	17.7	8.8	23.1	여성가족국 노동국
강원도	11.4	21.0	10.6	5.7	21.5	18.8	보건복지여성국
충청북도	8.2	31.2	5.5	12.8	13.3	21.1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7.8	32.2	5.9	14.4	12.0	20.5	여성가족정책관
경상북도	8.9	31.3	8.8	6.7	16.0	20.5	여성가족정책관
경상남도	8.4	38.6	2.2	7.9	14.0	21.3	여성가족정책관
전라북도	11.7	20.9	10.2	4.3	22.1	20.7	국세협력과
전라남도	11.7	30.1	2.7	4.0	23.2	18.5	여성가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9.6	34.1	5.3	7.5	13.7	23.1	인구청년정책관
서울광역시	7.7	16.9	10.7	22.2	6.8	25.5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밑줄+굵은 글씨는 전국평균 대비 해당 외국이주민 구성비율이 높은 경우 표기함



03

## 이민 ·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3) 지역맞춤형 정책

- 중앙정부의 기획중심 → 지자체 현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다문화(이민)정책  
관련 용어

이민/다문화정책  
현황

이민/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이민정책의 지방분권  
현황 진단

결론 및 제언

#### [정책방향]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추진
  - ✓ 지자체에 이민전담 부서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참여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p.71)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p.24)
- 법무처 인구정책 TF: 우수 외국인재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 ✓ 수도권, 대도시 외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유치·적응 프로그램 도입(p.9-10)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통합정책 개발 등에 대한 수요 (법무부 내부자료)



## ♣ 감사합니다 ♣

- 이 발주제문에는 확정되지 않은 비공개 정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 및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총 합 토 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